

조간 제818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음력 9월 2일)

최태원 "호남 반도체 최대한 빨리…전력·용수 늦어도 착공"

광주 군공항·탄약고 이전 예정지 방문… 부지 등 점검
수요 증가에 용인·호남 공장 병행 건설 가능성 언급
부지 추가 확보 땐 규모 확대도…투자 우려 불식 평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호남 클러스터 규모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수준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수요와 부지 확보 여건에 따라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용인과 호남에서 공장을 병행 건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SK그룹 관계자들이 동행한 가운데 군공항 관제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부지 확보 방안,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둘러보며 현장 여건을 살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생산시설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며 "지금 빠른 속도로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하는 것이 현재"라고 말했다.

호남 클러스터 규모를 용인의 3분의 2 수준으로 제시한 최 회장은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생산시설을 더 확보해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부지와 (반도체 팹) 조성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일정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체 건설 일정을 12년 앞당겼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용인과 전남광주에서 공장을 병행 건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최종 사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전남광주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살펴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 시점은 공장 건설 일정과 맞물려 있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만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공사 계획과 조율해야 한다. 최 회장은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부지·수요 등 투자 여건이 갖춰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그룹 수장이 직접 반도체 부지를 찾아 사업 여건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면으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정진욱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회피"

"예외규정 전면 재검토해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30% 의무채용제도'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 기관 가운데는 이전지역인재를 2년 연속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 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으라고 만든 제도인데도 어떤 기관은 2년 연속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채용 5곳, 석사 이상 연구직 4곳 등이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개의 예외사유가 중첩 적용됐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하고, 같은 해 7급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성오 기자

소외 받는 곳 없도록…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

전남광주특별시,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전면 지급 구상
4개 군 1·2차 시범사업 선정…3차 탈락해도 자체 지원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현황

구분	대상지역	추진 일정
1차 선정 (2개 군)	신안, 곡성	올해 1월부터 지급
2차 선정 (2개 군)	구례, 보성	7월~내년 말 지급
3차 도전 (12개 군)	강진, 고흥, 담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영광	12월 18곳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에도 내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신안·곡성·구례·보성군에 이어 나머지 12개 군까지 혜택을 넓혀 관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비 없이 마련해야 할 사업비가 최대 12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통합시와 해당 군의 재원 확보와 분담 협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3차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관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시의 구상은 정부 공모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모에 선정된 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군은 통합시와 군이 비용을 나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곡성군이 지난해 정부의 1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차 사업에 선정된 구례·보성군도 지난 7월 지급을 시작했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이들 4개 군 주민 13만명이 1인당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강진·고흥·담양·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2개 군은 3차 공모에 도전한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